



미국의
이란 전쟁
3, 10~11면

우크라이나인들의
징집 반대 운동
4면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5~8면

이재명의
개각
8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기원 9면

시온주의 정착자들의
서안지구 공격
12면



네팔 대홍수 2면

징집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인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관련 기사 4면



징집 대상자 연행을 저지하려 모인 우크라이나인들. 8월 25일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폴 시

네팔 대홍수

기후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관한 경고

네팔 국경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빙하 붕괴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 사이언티스트》는 눈이 녹아 취약해진 커다란 빙하가 1킬로미터 깊이의 계곡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이 정확하다면 이번 참사는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인 것이다.

이번 재난은 기후 변화가 낳을, 과소평가되고 자주 무시되는 위험을 밝히 보여 준다.

지질학자이자 기후 과학자 빌 맥과이어 교수의 최근 저서 《세계의 운명》은 지질학적 과거에 일어난 전 지구적 변화를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한다.

맥과이어 교수는 지구 온난화가 예측 불가능한 지질학적 변화를 일으켜 재앙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구 온난화는 기후 시스템에 열을 가둔다. 그러면서 전보다 격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난다. 전보다 허리케인이 강해지고 잦아진 것이 한 사례다.

허리케인만큼이나 파괴적이지만 덜 가시적인 위험도 있다. 얼음이 [눈에 비해] 밀도가 매우 높기에 빙하와 빙모는 엄청나게 무겁다. 그 얼음이 녹으면 지표면을 누르는 무게가 줄어들어 막대한 양의 암석을 움직이게 한다.

지난 빙하기에 북극에서 남쪽으로 확장된 빙하는 지표면을 내리눌렀다. 그 빙하는 1만 1,000년 전에 후퇴했지만 눌러있던 지각은 아직도 융기하고 있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반도는 1년에 10밀리미터씩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인 척도로는 얼마 안 되지만 지질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다.

얼음이 녹을 때 지각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전 세계 산맥의 변화도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히말라야·안데스·알프스 산맥 등지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일어난 지각 변동으로 암석과 토사가 이동해 더 광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대개는 소규모 산사태가 벌어질 테지만, 때로는 막대한 암석과 토사가

지구 온난화는 날씨뿐 아니라 지질학적 재앙을 낳을 수 있다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은 암석 간 단층의 마찰을 줄여, 지진을 일으킬 막대한 힘을 방출시킬 수도 있다. 사실, 폭우조차도 암석을 움직일 만큼의 물을 쏟아 낼 수 있다.

시한폭탄

기후 변화와 지질학적 변화 사이의 이런 연관성은 언뜻 직관에 반하는 듯하다. 흔히 기후 변화를 날씨와 관련된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를 지키려면 이런 더 광범한 지질학적 결과도 알아야 한다.

비극이 벌어질 위험을 경고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맥과이어 교수는 타지키스탄의 사레즈호를 “진정한 시한폭탄”으로 일컫는다.

사레즈호는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 170억 톤이 자연 발생한 독에 갇혀 형성된 거대한 호수다. 1911년 지진으로 형성된 그 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이다. 그런데 인근에서 지진과 산사태를 부를 수 있는 900개에 이르는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중 하나가 독에 균열을 낼 만큼의 물을 움직일 산사태를 일으켜 사레즈호의 물을 방류시킬 가능성이 있다.

1968년 산사태가 나서 사레즈호에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인 바 있다. 오늘

날 독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 독이 무너져서 쏟아지는 물은 약 1,400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18만 2,000명의 도시 테르메즈시(市)까지 휩쓸 것이고, 그곳에서도 수위가 2층 건물 높이에 이를 것이라고 맥과이어 교수는 예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비극적이게도, 비록 규모는 그보다 작더라도 유사한 위험이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번 주 네팔의 재난은 한 사례일 뿐이다.

이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한 피해를 완화할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댐·교각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수·수리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감사·경고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긴급 구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불이 보여 주듯, 소방 장비와 숙련된 소방 인

력이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부족하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멈추고 추가 채굴을 중단시킬 정책도 시급하다.

오늘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하나가 상황을 더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모든 홍수와 산불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시급히 취해야 탄소 배출 역사의 대가를 떠안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

21세기는 거대한 재난의 세기가 될 것이다. 그에 대비하려면, 화석 연료에서 얻는 이윤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의 지향을 급진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마틴 엠슨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주의적 대안》(공저) 저자

출처 Martin Empson, 'Massive flood in Nepal is a warning of climate change's consequences' (2026. 8. 27) / 번역 김준호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울산/부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을 통해 살펴본다

왜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해야 하는가?

일시 9월 6일(일) 오후 3시

장소 울산 비플라운지 (중구 성남동 94-12, 3층)

발제 권준모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HD현대중공업 노동자 / 정선영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지역모임들 문의 010-3328-9853 / busan-ulsan@ws.or.kr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 전쟁으로 체면 구길까 두려운 트럼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이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이 무성하다.

분명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둘 다 직면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 모두 속전속결을 예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런데 지금 둘 다 수렁에 빠져 있다.

오히려 이란 전쟁은 다시 격화하는 듯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양쪽이 다시 포격을 주고 받았다. 이런 전개가 뜻밖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지난 주만 해도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의 대결을 다른 프레임으로 제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션트는 “적대 세력을 향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에 나설 것”이라며 “경제 판 노르망디 상륙 작전(디데이)”을 선언했다.

베션트는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이집트의 [국영은행] 방크미스르 아랍에미리트(UAE) 지점 두 곳만 타격받았을 뿐이다.

지난주에 베션트는 자신이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싶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 베션트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리저리 조정해 왔다.

지난 주말 <파이낸셜 타임스>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서방 국가들이 국제 수익률 상승(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이자 증대) 탓에 부채 부담이 수십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베션트는 미 국제 수익률이 오르는



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

것을 막으려고 온갖 잔꾀를 부렸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데서 진정한 난관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퍼센트를 수입한다. 중국은 미국의 신규 제재가 자국 기업들에 가해지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빈말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가 크게 기대고 있는 희토류 생산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트럼프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 주기 위해 미국에 희토류 공급을 한 차례 끊었던 바 있다.

희토류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투트랙 전술을 펴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 제재를, 다른 한편으로는 미 전쟁부가 호르무즈해를 다시 열려고 애쓰고 있다. 유조선들이 이란의 봉쇄 시도를 피해 호르무즈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온갖 계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현재 호르무즈해를 통과하는 석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의 이란 폭격이 기뢰를 추가 부설하려는 이란의 움직

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미 중부사령부의 발표는 시사적이다.

이런 충돌은 더 격화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것은 이란 정권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양쪽 모두의 계산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전쟁을 격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비판가인 트리타 파르시는 이렇게 썼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하는 말은, ‘디데이’ 제재의 효과와 관계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간선거 이후 전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서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관들도 대체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8월 중순에 미군 최고 사령관들은 전쟁부장관 피터 헤그세스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연장할 경우 직면할 어려움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 장성들은 탄약 재고가 소진돼 전쟁이 길어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긴 파병 기간 탓에 병력과 군함 모두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미국이 이란과 대치하느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트럼프가 랫클리프를 모스크바로 보낸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것이였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최근 영국 노동당 총리 앤디 버넝의 키이우 방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지탱하는 구실을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주되게 맡고 있음을 잘 보여 줬다.

비판적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렇게 진단했다. “몇몇 유럽 나라들은 전쟁을 끝없이 갈구한다. 주로 북유럽과 발트해 연안국들이 그렇지만 최근에는 독일과 영국도 포함된다.”

트럼프는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무책임한 무모함을 금세 저지할 수 있다. 트럼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푸틴이 장단을 맞춰 주느냐다.

두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 열강은 둘 다 실패를 받아들이면 위신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데서 진정한 난관은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신규 제재가 자국 기업들에 가해지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징집 반대 운동을 벌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방위전’의 실상이 드러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언론은 줄지어 자원 입대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조명하며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임을 부각하려 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수많은 병사들의 무단 이탈과 탈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2월 이래 병사들의 무단 이탈과 탈영에 대한 수사가 29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한 뒤로 그 수치를 기밀에 부쳤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집에 대한 광범한 반감, 나아가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러시아지만, 이 전쟁은 그 전부터 이어져 온 서방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적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방은 러시아를 약화시킨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갈수록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원 입대 18~24세 남성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1년만 복무하면 출국을 허용하는 유인책을 도입했으나, 자원 병은 수백 명에 그쳤다.

불신

우크라이나 좌파 사회학자 볼로디미르 이슈첸코는 7월 22일 미국 좌파 웹사이트 ‘브레이크스루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단지 군대에서의 처우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향한 근본적 불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022년 말부터 입대자 대부분은 자원병이 아닌 징집병이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징집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징집관들의 동선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채널들이 등장했습니다.”

징집 기피와 저항은 전면전 개시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징집을 막는 주민들에 의해 파괴된 징집관 차량. 8월 25일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 시

2023년 대대적으로 홍보된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실패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부족에 직면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징병 대상을 확대하고자 병역법을 개정했다. 징집 대상인 25~60세 남성은 당국에 등록된 정보를 2024년 7월 16일까지 갱신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 기피자로 간주됐다.

그러나 2026년 초까지도 정보를 갱신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오른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는 ‘부시피카치야’(busification)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즉자적으로 옮겨 붙인 ‘승합차화(化)’라는 뜻으로, 징집관들이 길거리에서 징집 기피 남성을 기습해 승합차에 태워서 납치하듯이 군사 시설로 끌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025년 초부터는 ‘승합차화’를 강행하려는 징집관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간인 사이의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친서방 우크라이나 언론 〈우크라이나 인스카 프라우다〉는 2025년 초부터 2026년 중반까지 우크라이나 북부에서만 징집관 대상 공격이 167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전면전 개시 이래

그전까지 그런 사건은 총 3건에 불과했는데 말이다(전국 통계는 당국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징집관은 이렇게 불평했다. “로빈 후드’ 같은 사람들이 자주 나타난다. 이들은 많은 경우 여성인데,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세적으로 징집 대상 남성들을 빼내려 한다. 그러면 다른 ‘우려하는 시민들’이 가세한다. … 그들은 우리에게 개를 풀고 공무 집행 차량의 창문을 박살 냈다. … 거리 근무는 현재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마르타 하우리슈코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여성들이 ‘승합차화’에 맞선 저항에 갈수록 앞장서고 있다.

“여성들은 징집 대상 남성들에 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승합차화’가 상징하게 된 우크라이나 사회의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요소도 있다. 강제 징집은 가난하고 힘없는 남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으로 갈수록 인식되고 있다.”

하우리슈코의 지적처럼 징집에 맞선 저항에는 계급 차별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징집관들은 가난한 지역에 훨씬 더 집중하고, 부자들은 거액의 뇌물을 써서 다양한 방법으로 징집을 피한다.

징집에 맞선 저항은 대체로 자생적이지만 최근 들어 질적인 변화도 있다. 7월 초 리비우에서는 징집관들을 상대로 소요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졌다. 몇몇 무단 이탈한 병사까지 민간인들 편에서 그 충돌에 가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두드러진 가담자들을 기소했지만, 얼마 후 8월 25일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 시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다.

충돌

한편, 우크라이나 남서부 빈니차에서는 57세의 민영 버스 기사가 징집관들에게 끌려간 것에 항의해 동료 기사들이 버스 운행을 거부하기도 했다. 노동계급이 징집에 맞서 조직적 행동을 벌인 작지만 중요한 사례다.

이런 반발과 저항은 단지 전쟁이 장기화된 탓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이 전쟁이 다수의 동의와 능동성에 기초한 ‘인민 전쟁’ 방식으로 결코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는 제국주의 대리전이라는 이 전쟁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좌파는 이 문제를 전쟁의 성격과 분리시키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부패를 일소하고 징집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 역시 전쟁의 성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동안 서방과 러시아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부패한 권력자들을 대리자로 삼아 힘겨루기를 해 왔기 때문이다.(그리고 전면전 개시 이래 계엄을 유지해 온 젤렌스키는 이제 대통령 임기도 무단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서방의 승리든 러시아의 승리든 어느 한 제국주의 진영의 승리는 진보일 수 없다. 반제국주의 좌파는 징집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이나 전면전 초기 러시아에서 일어난 반전 시위처럼, 자국 정부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저항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원웅

AI 패권 경쟁과 메가프로젝트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

장호중

이 글은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한 발제를 글로 옮긴 것이다. 다만 청중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과 논쟁을 반영해 필자가 글의 후반부를 적잖이 수정했다. 특히 AI 거품 붕괴가 낄을 파괴적 효과와 전망을 명확히 하는 데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연 지 두 달이 다 돼 간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① 반도체, ② 퍼지컬 AI, ③ AI 데이터센터에 약 1,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4,000조 원이 넘는 액수가 거론된 적도 있다. 삼성이 2040년까지, SK는 명시하지도 않은 어떤 시점까지 투자할 계획을 모두 합친 액수이니 다소 과장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이번에 발표된 액수는 앞선 두 정부가 내놓았던 반도체 투

자 계획의 8~10배가량 된다. 자본가들이 순진하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국힘도 계획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호남에 집중된 것에 비판적이었을 뿐이다. 대자본가들이 대체로 메가프로젝트에 우호적임을 보여 준다.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부지와 전력, 용수를 대고, 송전선을 놓고, 군 공항을 옮기겠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로봇 선구매뿐 아니라,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면책과 감사원 감사 면제까지 검토한다.

8월 12일에는 7대 첨단기술 프로젝트(시드 프로젝트) 발표가, 8월 14일에는 국방 로봇 업무협약이 뒤따랐다.

이런 파격적인 시도에는 오늘날 AI 산업과 그것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서 한자리(AI 경쟁력 3위 목표)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다.

AI 패권 경쟁은 왜 제국주의 경쟁인가

오늘날 AI 경쟁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경쟁에서 현재 가장 두드러진 측면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 제국주의는 단지 강대국의 나쁜 정책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1916년에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고(혹은 최신) 단계”라고 봤다. 자유 경쟁이 자본의 집중과 집중(독점)을 낳고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자, 거대 자본이 국가와 융합해 세계 지배를 두고 다투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경쟁에는 두 축이 있다.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다. 그리고 제국주의 경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또 다른 근본적 법칙인 불균등 발전과 결합된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선진국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밟아야 했던 단계나 형성한 관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

고, 그래서 새로운 생산 기술과 기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대표적이다. 그러면 군사적·지정학적 능력도 발전하고 세계적 강국의 순위도 재편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협력은 유지될 수 없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결국 타협해 '규칙 기반 질서'가 회복되리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레닌과 부하린은 군사적 경쟁이 평화적 경쟁으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그것의 필연적 발전 결과라고 지적했다.

19세기에 이런 경쟁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 생산물은 철과 석탄이었다. 철도는 돌을 결합하는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는 AI가 바로 철도 같은 구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는 생산물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자본주의적 경쟁을 가속시키고 있다

전기, 물, 반도체, 노동: AI '생산'의 네 기둥

AI의 실체를 하나의 '생산 과정'으로 보면 왜 기업들의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발전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과정의 단계마다 재정과 강제력을 가진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전력이다.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10년대 중반까지 60테라와트시에서 거의 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 구실을 할 뿐, 정보를 생산하는 구실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7~2023년 사이에 그 수치는 176테라와트시로 뛰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4.4퍼센트다. 2028년에는 6.7퍼센트에서 최대 12퍼센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데이터센터가 창고에서 공장으로 바뀐 것이다.[그림 1] 중국의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 수치로 2022년 77테라와트시, 2030년 추정 400테라와트시다.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5퍼센트, 중국은 25퍼센트다. 2024년 기준 하이퍼스케

일러(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보면 미국은 51퍼센트, 중국은 16퍼센트다.

규모를 실감하기 위해 비교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초대형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로서스 한 대는 인구 25만 도시만큼 전기를 쓴다. 이런 막대한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에서 나올 전력을 20년 동안 사기로 계약하고, 트럼프는 “좋고 깨끗한 석탄”을 내세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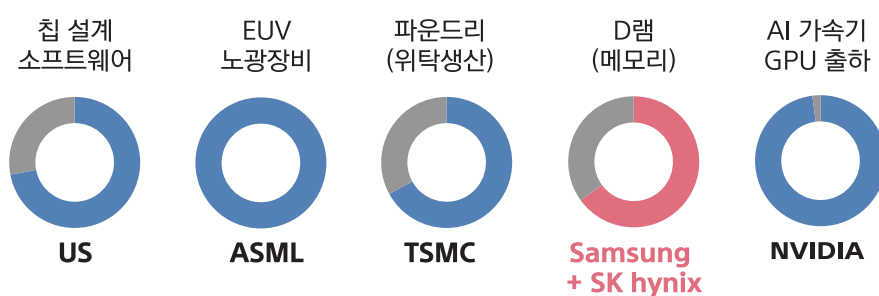
둘째, 냉각에 필요한 물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심각한 가뭄 지역에도 있다. 기후 위기로 가뭄이 더 극심해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반도체다.

1971년 인텔의 첫 상용 마이크로프로세서에는 트랜지스터 2,300개가 들어 있었다. 오늘날 5나노 공정은 1제곱밀리미터에 1억 7,100만 개를 넣는다. 고도로 발전한 기반 산업이 필요하다 보니

▶ 6면으로 이어짐

세계 반도체 시장과 독과점



▶ 5면에서 이어짐

공정마다 독점이 생긴다. TSMC는 2024년 세계 위탁생산의 최소 64퍼센트를 차지했고, 최첨단 공정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머신러닝용 칩 시장의 80~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ASML 한 회사만이 만든다.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칩 설계 매출의 46퍼센트를 차지했다. [그림 2]

넷째, 훈련 데이터와 그것을 만드는 노동이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사람이 한다. 그 일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인도와 케냐와 우간다로 외주화됐다.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이미지와 글에 태그를 달아야 하는데,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끔찍한 범죄나 아동 학대 장면 등을 보고 그것들을 분류한다. 그런 고역에 노동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손꼽히는 데이터 라벨링 회사인 스케일AI의 고객 명단에는 미군의 상당 부분이 들어 있다.

광산과 발전소, 수자원, 저임금 노동을 최첨단 기술과 결합시키는 AI는 “대규모의 장기적 투자가 중요한 기술 경쟁”이다. 그러므로 이 산업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가속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불러들인다.

‘국가의 귀환’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의 재편

국가를 불러들인다고 해서 그동안 국가가 떠나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재편하는 것”이었다. 해체가 아니라 재편이었다.

오늘의 국가자본주의도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제약과 정치적 조건에 따른 자본주의 지상 명령의 최신 적응 형태”라고 봐야 한다.

니콜라이 부하린은 이 적응의 원리를 1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국민경제’는 금융 집단과 국가가 형성한 하나의 거대하게 결합된 트러스트로 전화된다. 우리는 이 조직을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핵심은 세계경제가 긴밀히 통합될수록 국가 간 경쟁이 오히려 격화한다는 역설이다. 110년 전 카우츠키 이래 좌우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는 그 반대의 동향이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을 통해 첨단산업에 2,8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인텔, TSMC, 삼성, 마이크론 등이 수혜를 입

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인텔 지분 10퍼센트를 가졌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기업 자본의 42.5퍼센트를 소유한다. 2015년에 도입된 국가안보법은 모든 기업을 국가 안보의 대상으로 삼는다. 공산당 규약에 따라 모든 기업에 당 세포가 들어간다. 반도체 대기금에는 1,500억 달러가 들어갔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하자면 시진핑은 “과도한 복지주의”를 “나태를 기르는 함정”이라고 일컬었다. 중국은 앞에 무슨 수식어를 달든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 없는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미중 경쟁은 국가자본주의들 사이의 경쟁, 제국주의의 경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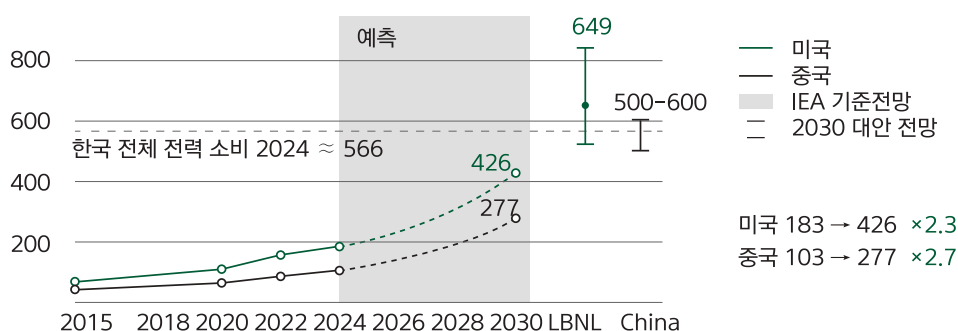
물론 국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이 허용된 것에서 보듯 국가도 자기나라의 대자본들과 협상해야 하는 처지이고, 트럼프가 늘 짜증을 내는 이유다.

용어설명

스푸트니크 모먼트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가 후발 주자의 기술에 충격을 받는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1957년 옛 소련이 최초의 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데서 나왔다.

미국·중국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2015~2030



경쟁이 가하는 압력 - 하루 만에 사라진 시가총액

NVIDIA, 2025년 1월 27일

-\$589B
딥시크 발표 직후 — 미 증시 사상 최대 하루 손실

Meta, 2022년 2월 3일

-\$232B
종전 최대 기록

딥시크 충격이 불붙인 칩과 희토류 쟁탈전

AI 산업에서 “산업적 수단과 목적을 군사적 수단과 목적에 융합하라는 압력”은 국가자본주의화의 전형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

2025년 1월 중국의 딥시크가 훨씬 적은 칩으로 미국 최상급 AI 모델에 맞먹는 성능을 냈다. 그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에서 5,930억 달러가 지워졌다. 미국 주식 시장 역사상 하루 사이에 사라진 액수로는 최대 규모였고, 전문가들은 “스푸트니크 모먼트”라고 불렀다.

그러자 트럼프는 중국의 AI 연구를 묶어 두겠다고 AI 칩 수출을 통제했다. 이는 중국의 혁신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자극했다. 제2차대전으로 천연고무가 끊기자 미국이 국가 개입으로 합성고무를 만들어 낸 것과 마찬가지로.

딥시크 발표 하루 뒤, 스케일AI의 최고 경영자 알렉산더 왕은 트럼프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의 공격”에 맞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경제와 군사의 융합은 자원 쟁탈전으로도 나타난다. 인공지능과 희토류는 깊이 얽혀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희토류 수입의 70퍼센트를 중국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가동 중인 광산은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패스 하나뿐인데, 그것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 일부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용 중희토류를 가공할 능력이 없어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위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섬에는 세계 50대 핵심(미국 지배층이 안보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원자재 가운데 43종이 묻혀 있다. 유럽연합이 지정한 핵심 원자재 34종 가운데 22종이 우크라이나에 있다.

부하린은 이런 자원 통제(독점)의 논리를 110년 전에도 지적했다. “한 번 특정 ‘국민적’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면, 다른 집단은 손을 쓸 수 없다.”

AI와 군사의 융합은 이미 현실

동시에 정부 문서에서 갈수록 전쟁의 언어가 늘어나고 있다. 백악관의 <AI 행동 계획>은 “의문의 여지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상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부통령 밴스는 2025년 3월 투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의 전쟁이든, 미래의 일자리든, 미래의 경제적 번영이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여기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드론 제조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연간 100만 대의 드

론을 소모한다며 “군사 구매력”이 “재산업화에서 ...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가자에서 AI는 이미 대량 감시 체계로 쓰이고 있다. 타격 대상 건물을 고르는 AI의 이름은 ‘가스펠’, 사람을 고르는 AI는 ‘라벤더’라고 불린다. 팔란티어는 이란 전쟁에서 신속한 결정으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메이븐’ 시스템을 구축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하는 데에는 엔트로픽의 LLM 모델이 사용됐다.

이재명 정부는 “전격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AI 메가프로젝트와 '방산 강국' 프로젝트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 아류제국주의로의 도약

한국은 이런 경쟁의 그림 속 어디에 있을까? 30년 가까이 중국에 투자해 온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도 모순된 처지에 놓여 있다. 삼성은 시안에, SK는 우시와 다롄에 공장이 있다. 미국처럼 중국도 한국 기업을 이용하려 하면서 동시에 견제한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미중 사이 줄타기에서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질서 안에서 줄타기를 하며 자기 몫을 키우려는 시도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자주적' 핵 능력이란 '소버린' AI든, 앞에 무슨 말이 붙든 그것이 무엇을 위한 능력인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AI가 지금까지 실적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분야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전쟁, 즉 살상 능력이다.

메가프로젝트 문서에도 군사가 있다. 국방반도체, 국방 로봇이 있다. 8월 12일 발표된 7대 프로젝트 가운데 세 가지, 즉 핵융합, 양자 컴퓨터, SMR(소형모듈형핵반응로)은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한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기술들이다.

부하린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설명했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의 군사력은 그 트러스트가 경제적 투쟁에서 쓰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류제국주의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 그러나 잠재력은 현재의 상태와 구별된다. 즉, 아직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력, 물, 노동에 돌아올 메가프로젝트의 청구서

이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는 2040년 테이터센터의 추가 수요를 24.7기가와트로 제시했다. 핵발전소로 치면 18기 분량이다.

서남권에 대겠다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는 200만 명이 쓰는 수도물과 같은 양이다. 그만큼 수원을 확보하려면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실제로 시행된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개발 사업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둘 다일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안)은 소득 상위 3퍼센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한다.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말도 했다.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

이 압박은 미국 실리콘밸리, 유럽, 일본의 경쟁사 노동자들에게도 가해진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 나라들과 일본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AI 경쟁에 국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한편, 노동 규제를 개악하려 한다. 국가자본주의들의 경쟁이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는 정면 탄압보다 설득과 회유를 앞세울 것이다. '메가프로젝트가 잘돼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노동자한테도 이득이다', '지금 경쟁이 심한데 당신들이 그런 요구를 하면 우리나라가 뒤쳐진다, 국익을 해친다' — 이런 논리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AI 호황의 성과가 노동자의 삶으로 흘러내린다는 약속은 실현된 바 없다. 대만에서도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이라는데 청년 주택난과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거품을 알아도 멈출 수 없는 AI 질주

일각에서는 AI 거품을 크게 강조한다. 거품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장부 가치 대비 주가로 측정된 AI 거품의 규모는 2000년 닷컴 광풍 때의 17배다. 2025년 AI 자본지출은 3,320억 달러인데, 매출은 287억 달러다.

앞서 말한 대로 이 거품은 한국만의 것도 미국만의 것도 아니다. 각국이 국가 지원으로 밀어 올리는 투자 규모가 세계적으로 거품을 부풀리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터질 때의 파급도 한 나라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품의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자본주의 하에

서 세계적 경쟁이 각 참가 단위로 하여금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I를 향해 질주하게 만드는 압력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AI 도입으로 일자리 증가나 생산성 향상이 지표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AI가 도입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AI 도입이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한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경쟁을 강화해 노동시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용어로 하면 절대적 잉여가치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들

보다 먼저 더 효과적인 AI를 도입한 기업은 특별 잉여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

경제 전체에 내는 효과가 무엇이든, 기술을 먼저 도입한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우위를 위해서라면 경제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가 무슨 일을 겪든 개의치 않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30년 넘는 기후 '협약' 끝에 네팔에서 벌어진 끔찍한 재난을 보라.

이 정신 나간 질주가 단지 경제적 경쟁에서 그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

▶ 8면으로 이어짐

중도보수 지향 개각으로 지지자들에게 배신감만 안겨 주는 이재명

8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중폭 개각은 최근의 정치 위기를 더 분명해진 중도보수 노선 지속·강화로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기는커녕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실패한 경제 관련 부처들의 관료 내부 승진, 한미동맹 현대화에 앞장선 외교·안보 라인 유임 등의 인사는 지지층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치 않는다는 뜻이다.

출범할 공소청을 관할할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 김승원은 판사 출신 의원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 이재명 재판 공소 취소에 앞장서 왔다(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이재명은 정부 전반 기조에서는 우파와 타협하면서 우파의 대통령 재판 재개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책을 편 것이다.

예산·조직·정책강제력 면에서 핵심 정부 기관이 아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내정 논란은 개각의 우파적 본질을 가린다.

“기업가형 국가”

개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반발 속에서 9월 1일 ‘자진’ 사퇴했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질됐지만, 그들 지휘



중도보수 지향 개각은 이재명을 더한층 수렁으로 몰고갈 것이다

하에 실무를 담당했던 해당 부처 차관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친기업적인 성장 우선(“기업가형 국가”) 노선의 지속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이소영)와 청와대 AI수석 자리(이해민)에도 친시장경제 성향이 뚜렷한 의원들을 지명했다.

민주당 의원 이소영은 한때 진보 정당(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도 몸담았었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주주자본주의와 주식시장 활황을 통한 성장론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해왔다. 청와대 AI수석으로 내정된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은 구글 출신이다.

우파는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

원의 내정이 왼쪽 품기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두 당은 좌파 정당이 아니다.

군부 출신 국방장관의 귀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군부 출신이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강신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다.

강신철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공식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사전에 알았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과 강신철이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상

의했는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대통령 스스로 육군사관학교가 군사 쿠데타의 산실이라며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으면서, 막상 국방부 장관에 육사 출신 장성을 앉히려 하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와 끈끈한 관계와 전시작전권 전환 협상 등을 크게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신철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현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동시에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한 장성 인사와 육사 폐지론 등으로 불만이 쌓인 군부, 특히 육사 출신 엘리트들을 달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이로써 지지부진하던 군 내부의 내란 청산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진보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을 비판하면서도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 임명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개각의 핵심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유튜브 ‘김종훈 TV’에서 개각 인사를 옹호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이유로 용혜인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각 전반을 비판했으나, 정작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김문성

▶ 7면에서 이어짐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대자본이 파산하지 않도록 엄청난 재원을 투입했다. ‘부자들의 사회주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번에 AI 거품이 붕괴하면 2008년처럼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처럼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한 채(그 결과 유럽 등 다른 주요국의 은행도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려고 할지, 할 수 있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트럼프가 해 온 것처럼 ‘자국 우선’을 강조하며 국가자본주의적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하면, 그 시도 자체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균열과 국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국가자본주의화가 특별히 우려스러운 이유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화는 AI 경쟁보다 먼저 진행돼 왔다. 그것이 크게 가속된 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였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 나온 조치들은 하나같이 국가의 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로 뻗어 나가는 것이었다.

동시에 중국 지배자들은 자국 군사력을 빨리 키우지 않으면 경제를 아무리 따라잡아 봐야 소용이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자본주의화를 더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중국의 ‘굴기’를 그냥 뒀다가는 미국이 경쟁에서 따라잡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전환’(피벗)을 선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양대 강대

국이 똑같은 것을 느꼈다는 점이다. 이전과 같은 방식의 경쟁으로는 더 이상 쉽지 않다는 것 말이다. 그리고 그 결론의 핵심 요소 하나가 바로 군사력과 산업을 한층 더 융합하는 것이었다.

이런 추세가 위기를 맞으면 전쟁이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AI가 군사 영역에서 발달하고 비대칭 전쟁 수단으로 세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품 붕괴는 경제 위기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를 심각하게 격화시키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겠지만, 더 지긋지긋한 것은 그런 일만으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질서가 저절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레

닌이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가 전쟁과 착취 강화 통제를 노동계급을 희생시켜 극복하지 못할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19세기 말부터 위기에 시달려 온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사반세기 넘는 장기 호황을 누린 것이 그런 사례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핵보유 열망과 AI 기술의 군사적 이용, 반도체와 희토류 생산을 위한 국내외의 환경 오염,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와 착취 모두에 맞서야 한다.

메가프로젝트와 국가자본주의적 경쟁 강화가 노동계급에 내미는 청구서, 그것에 맞서려면 자국 지배계급의 ‘국익’ 추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생태학의 기원

러시아 혁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보호, 생태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 혁명이었다.

1908년 볼셰비키 과학자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가 쓴 소설 《붉은 별》에는 화성에 세워진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에너지 위기를 걱정하는 두 화성인의 대화가 나온다.

스테르니라는 이름의 화성인은 지구인을 모조리 죽여 지구의 천연 자원을 갈취하자고 제안한다. 이 작품은 러시아 혁명 이전에 쓰였지만, 스테르니의 화성인 동료 네티는 사회주의자라면 “생명의 한 독자적 유형을, 되살릴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통째로” 멸종시키자고 제안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스테르니를 호되게 비판한다.

소설 출간 9년 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차르 전제정이 타도됐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다.

혁명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포고령 하나는 토지 공유화였다. 이후 삼림과 야생 생물에 관한 포고령으로 사냥과 벌채를 제약했다.

블라디미르 레닌 자신도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고, 지리학자 블라디미르 수카초프가 쓴 습지에 관한 선구적 저작을 탐독했다.

혁명을 파괴하려는 백군에 맞서 전쟁을 하던 1919년에도 레닌은 시간을 내어 환경보호론자들과 만났다.

레닌은 볼셰비키 당원이자 교육인민위원[교육·과학·문화부 장관에 해



혁명 러시아는 자연 보호와 생태 연구에 앞장섰다 1920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삼림

당] 아나톨리 루나차르스키가 새로운 관점에서 자연을 다루는 것을 지지했고, 교육인민위원부가 환경 문제를 관할하도록 했다.

레닌은 루나차르스키의 “자포베드니크” 조성 노력을 고무했다. 자포베드니크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자연 보호 구역이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우, 자연 보호 구역 지정의 제일 목적이 휴양지 조성인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혁명적인 일이었다.

1929년이 되면 러시아 곳곳에 약 61곳이 자포베드니크로 지정됐다. 총 면적은 400만 헥타르에 이르렀다.

자포베드니크는 생태적 사고의 혁신을 낳았다. 볼셰비키 이전 생태주의자들은 주되게 식물과 토양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자포베드니크 덕에 과학자들은 생태계에서 동물이 수행하는 필수적 역할을 관찰

할 수 있게 됐다.

자포베드니크 덕에,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학계에서 고립무원이던 생태학자 블라디미르 스탄친스키가 에너지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스탄친스키는 먹이사슬의 단계마다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이론을 세웠다. 먹이사슬의 단계마다 매우 작은 에너지만 전달되기 때문에 먹이사슬 최상층 유기체 몫으로 남는 에너지가 매우 작고, 그래서 해당 생태계 내 포식자의 숫자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환경과학과 고고학의 기초인 “영양 단계” 모델의 바탕이 됐다. 볼셰비키는 스탄친스키의 이론을 받아들였고 스탄친스키는 소련 최초의 생태학 학술지의 편집자가 됐다.

서방에서는 연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지구과학자 블라디미르 베르나츠키 같은 사상가들이 볼셰비키 정

부의 지원을 받았다.

베르나츠키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에 재직하며 생물권(biosphere)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이론은 동식물에 의해 자연의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르 오파린 등 소비에트 생태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이론을 수립했다. 유전학자 니콜라이 바빌로프는 재배 식물의 기원을 발견했다.

생태학에 관한 이런 볼셰비키 전통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부상과 반혁명, 그리고 스탈린이 농학자 트로피 리센코를 중용하면서 막을 내렸다. 리센코는 소련 내 생태학에 독재적 지배력을 행사했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자포베드니크는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 리센코에 반대한 바빌로프 같은 과학자들은 수감됐고 결국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혔다.

잠시였을지라도 러시아 혁명기에는 가능성이 만개했다. 과학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커졌고 인간의 인식을 제약하던 장벽들이 무너졌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생태학 전통은 혁명이 인류뿐 아니라 자연도 해방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레베카 기번

출처 Rebecca Givan, 'The start of a truly Marxist ecology' (2026. 8. 18) / 번역김준호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 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 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공개 토론회 영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팔레스타인인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7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이란 전쟁의 역풍: 미국 패권의 약화와 서아시아 질서의 재편

김인식

폭격과 제재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트럼프

미군이 한 달여 만에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은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와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며 맞대응했다.

미군이 폭격한 목표물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해협의 라라크 섬에 있는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였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에 인간 힘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란 정권도 결코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지난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항로 개설과 기뢰 공동 제거 등을 추진하기로 오만과 합의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오만 해안을 따라가는 기존 항로를 폐쇄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군은 오만 해안을 따라 일부 유조선에 호위 및 통행시켰다. 그래서 양국 합의 직전에 트럼프는 오만에 대해 욕설을 섞으며 폭격을 위협했던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교착 상태는 극히 취약하다. 트럼프는 이란을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제재의 난점

미국의 또 다른 대응은 이란 경제 제재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란 경제 제재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빗대 ‘경제적 D-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베선트의 발표는 실질적인 제재 집행이라기보다 위협성 엄포에 가까웠다. 베선트 자신도 “이번 조치는 경고 사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이란과 중국의 경제적 유대를 끊어야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자렛대(희토류 등)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선트 자신도 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 집행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폭파”시킬 수 있다고 실토했다.

게다가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와 봉쇄를 견뎌 왔다. 만약 페르시아만이나 홍해가 무기한 봉쇄될 경우 미국과

걸프 국가들, 세계 자본주의가 치러야 할 비용이 이란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손실의 균형추는 미국과 세계 경제 쪽에 훨씬 더 쏠려 있다.

이란 전쟁으로 노출된 미국의 약점

정말이지 이란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심각한 역풍을 맞았다. 세계에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중동에서 대만에 이르기까지 약점을 노출했다.

퇴역 미 육군 4성 장군 배리 R. 맥캐프리는 “미군이 페르시아만 기지 15곳에 대한 접근 권한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듯하다”고 X에 적었다(알자지라, 8월 25일 자). 최근 미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전역의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4성 장군들은 이란과의 장기전이 미국 본토와 다른 지역에서 적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가 ‘경제 전쟁’을 언제, 어느 수위까지 집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탈출구를 찾으려, 갈수록 심화하는 패권의 위기를 가리고자 중간선거 때까지 ‘전쟁이면서도 전쟁이 아닌’ 상태를 이어가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전투 타이밍을 빼앗아 오를 수 있다. 이미 7월 28일 이란은 교전 중단을 먼저 깨고 요르단의 무와파트 살티 공군기지 등을 미사일로 공격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트럼프는 ‘거대한 분노’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양해각서에서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계속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지만, 그때마다 제 살 깎아 먹는 소모전 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주도 중동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다

엷히기 시작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각각만으로도 이미 최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상호 망상과 달리 어느 쪽도 전장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소모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자 양측은 에너지망과 교통 요충지를 서로 타격하는 ‘기반시설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정교한 드론 수백 대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앞세워 유럽 동맹국들에 더 많은 자금과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젤렌스키의 의도

다른 한편으로 젤렌스키는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취약점을 파고들고자 한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이란 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를 설득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두 전쟁을 결합해 미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바랐던 일이지만, 미국로서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 CIA

국장 랫클리프가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타결을 러시아에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푸틴이 그 촉구에 응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7월 25일 카스피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러한 구상의 일환이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사주했다고 경고했다. 두 전쟁을 결합시키는 것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이란 북쪽 카스피해에 새 전선을 구축해 이란의 전력을 분산하는 데 자국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에 맞서 걸프 국가들을 타격했던 수평적 확전을,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상대로 구사한 셈이다.

이란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를 겨냥한 미사일 보복 공격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우세했다.

미국 부통령 밴스는 젤렌스키와 통화해 카스피해 등에서 비러시아계 선박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과로

메카 협정: 지역 제국주의 국가들이 미국 패권 약화의 공백을 메우려 기동하다

트럼프는 지역 동맹국에 묻지도, 통보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 걸프 중심지들은 하루아침에 이란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

당장은 긴장 고조를 피했으나, 이란은 이번 공격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외 정책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트리타 파르시 컨시연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이란이 진정으로 보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현안을 처리하느라 잠시 멈춘 것뿐이다. 이란은 우크라이나에 반격을 가했다가 뒷에 걸려드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미들 이스트 아이〉 8월 10일 자)

호르무즈해협에서 트럼프가 겪고 있는 좌절은 상황을 더 가혹하고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레크먼은 제국주의 경쟁의 양극화와 미국 등 서방 진영의 혼란상을 우려했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동시에 여러 대륙에서 발발했다. 두 전쟁 모두 명확히 구분되는 글로벌 동맹을 포함했다.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독일·이탈리아·일본으로 구성된 추축국은 영국·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과 맞섰다. 두 세계대전은 세계 최강국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했다.

“현재의 분쟁들은 이미 이러한 기준 중 몇 가지를 충족한다. 부분적으로 맞물리는 전쟁들이 유럽과 아시아라는 두 대륙에 걸쳐 있으며 아프리카의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중국·이란·북한 간 연대가 강화되자 미국의 일부 전략가들은 이 네 국가를 ‘적대국 축’(또는 ‘격변의 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전통적 동맹국들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의 적대적인 태도와 이스라엘이 유럽 및 걸프 지역 일부에서 점차 독립국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미 진영에 대응할 통일된 결속체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7월 27일 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메카 공동방위협정(이하 메카 협정)을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무슬림 나토’라고도 부른다. 물론 아직은 과장된 명명이다. 메카 협정은 통합 지휘 구조나 자동 군사 개입 메커니즘이 없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이 인도에게 공격받았다고 해서 튀르키예가 인도를 향해 진격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상징적 협약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세 국가의 군사력은 상당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 지역 석유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최신 군사 기술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핵무기 보유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며 인종학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지속해 왔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전략 계획과 중부사령부에 깊숙이 편입돼 왔으며, 군 지도자들은 미국 군사 학교에서 쿠데타 조직 기술을 비롯한 훈련을 받았다. 파키스탄은(‘비공식’) 핵 보유국이다.

더 중요한 측면은 군사력보다 정치적 파급 효과일 것이다. 메카 협정은 미국 제국주의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강국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자 공세적으로 기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의 관련 기사 제목이 흥미롭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방위 협정에 서명하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보장한 것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동맹국에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리라는 확신이었다. 미국은 군사 기지, 무기, 정보, 보증을 제공했고, 걸프 국가들은 탄화수소와 자본, 전략적 복종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질서에 지금 균열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과 블러핑 게임(심리전 게임)을 하듯 약속과 위협을 거듭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

래와 동맹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군이 주둔할지 철수할지, 관세가 오를지 내릴지, 오늘 체결한 협정이 내일 유지될지 파기될지 알 수 없다면 동맹국들은 더는 미국과의 관계에 충실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동 세력권의 변화

‘아브라함 협정’(‘이브라힘 협정’) 구상이 절정에 달했던 2019~2020년 분위기와 비교해 보면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다.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역 전체 투자가 확대되며 국가 간 긴장이 완화되고 미국은 중동 지역 안보의 최고 감독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브라함 협정의 기본 구상이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자본에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결합해 더 고도화된 자본주의 국가로 격상될 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도 협정 서명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의 완강한 투쟁과 예멘의 저항, 이스라엘의 인종학살과 영토 확장 시도, 미국의 이란 공격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첫 공식 방위 협정은 2025년 9월 발표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카타르에서 하마스 실무 협상단을 살해하는 공격을 감행한 지 며칠 뒤 취해진 조치였다.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의 영토 내부까지 사전 경고 없이 타격할 재량을 쥐고 있다면, 과연 미국에 ‘안보’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순간부터 각국 정권이 겪은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트럼프는 지역 동맹국에 묻지도, 통보하지도 않은 채 전쟁을 시작했다. 세

계에서 가장 불비는 공항, 초고층 빌딩, 호화로움의 극치를 달리던 걸프 지역 중심지들이 하루아침에 이란 드론과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

타리크 알리는 이렇게 지적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역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 저항하고 반격하는 이란의 능력은 걸프만 정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그들 모두가 피살된 하메네이의 대규모 장례식에 참석했다.

“걸프 보호국들에는 이중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란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 정권은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과, 파키스탄을 통치하는 군복 입은 지배자 아심 무니르가 이에 응했고, 메카 정상회담에서 세 수니파 국가의 새로운 합의가 성립됐다.”(Substack, 8월 25일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교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파키스탄은 메카 협정을 활용해 인도에 맞서고 싶어 한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사·기술 분야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제국주의를 세계를 나눠 먹는 자들의 경제적·군사적 힘을 반영해 식민지와 금융자본의 세력권을 분할하고 재분할하는 체제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분할 과정에서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다. 세계를 나눠 먹는 자들의 힘이 동일할 속도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적 동맹은 전쟁의 기반을 다지며, 역으로 전쟁을 통해 생겨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훨씬 더 대규모로, 더 파괴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갈수록 극악해지는 시온주의 정착자들의 서안지구 공격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의 마을 쿠스라에 대한 시온주의 정착자들의 공격이 극심해졌다.

쿠스라에서 정착자들은 아직 사람이 안에 있는 집 한 채에 밀고 들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점거한 후, 인근 땅에 불을 지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돌을 던졌다.

또한 정착자들은 쿠스라 마을 주택 세 채를 8월 9일부터 봉쇄한 채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정착자들은 그 주택들로 공급되는 전기와 물을 차단했다.

그중 한 채에 갇혀 있는 루이 리디씨는 언론에 이렇게 전했다. “저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를 당할까 두려워요. 정착자들은 계속 집 주변을 활개치고 다니면서 이웃집 사람들도 공격해요.”

8월 29일, 서안지구의 또 다른 마을 움 알카이르에서는 22세 영국인 활동가 핀 조킨이 체포당했다. 영상을 보면 무장한 정착자들이 조킨을 끌고 가 경찰에 넘겼다.

조킨은 정착자들의 공격에 맞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지키려고 그 마을에 체류 중이었다.

정착자들은 인근 이스라엘 정착촌 아이들이 팔레스타인인 주택 마당으로 진입하도록 부추겼다. 이후 그 아이들은 누군가 자기네 중 한 명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이어 조킨이 체포됐다.

움 알카이르 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이스라엘군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인에 폭력을 가하는 시온주의 정착자들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키르벳 움 알카이르의 현 상황은 극도로 위험하고, 모든 정황이 사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랫동안 정착자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지지와 이스라엘 군경의 보호를 받으며, 움 알카이르 주민들을 집과 땅에서 내몰려 갔을 수를 써 왔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의지를 꺾지도, 주민들을 내몰지도 못했다.”

성명은 그전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로 분류돼 있던 땅을 이제 지도에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다고 폭로했다.

“이것은 지도의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현지의 실상을 바꾸려는 것이다.

“점령 당국의 법률에 따르면, [‘분쟁 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된 이 땅에는 이제 정착자들이 들어와 눌러앉을 여

지가 생긴다. 이런 변화의 결과를 움 알카이르 주민들은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76명이 이스라엘군이나 정착자들에 살해됐고, 3,800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

이스라엘군은 체포·구금 작전을 더 강화하고 있다. 8월 초 팔라티아 난민촌을 습격해 단번에 60명 넘게 체포한 것도 그런 사례다.

이번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착자들의 쿠스라 봉쇄 행위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네타냐후는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법을 준수하는 정착민 민간인들에 대한 심각한 부정의이고 이스라엘군의 작전 수행을 방해하며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폭력을 휘두르는 정착자들이 그저 “극소수 폭도”일 따름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착자들의 폭력을 그저 불량한 소수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네타냐후의 변명은 공허하다.

정착자 폭력은 일탈이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살던 곳에서 내몰고 이스라엘 국토를 확장하려는 체계적 시도의 일환이다.

이스라엘군은 정착자들과 손발이 착착 맞고, 정착지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거부하기 일쑤다.

네타냐후는 정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연정 구성을 위해 극우 정치인들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네타냐후는 베잘렐 스모트리치와 이타마르 벤그비르와 10월 총선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다.

스모트리치와 벤그비르 모두 서안지구의 정착촌(국제법상 불법이다)에 산다. 둘 모두 팔레스타인인들을 더 많이 몰아내자고 대놓고 떠든다.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착자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때 도움을 청할 곳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커밀라 로일

출처 Camilla Royle, 'Palestinians fear for their lives as settler attacks increase' (2026. 8. 30)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가자 인종학살 3년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15:00~16:50 시온주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도니 클릭스틴 유대계 영국인 역사학자, 반전·반파시즘 활동가

17:10~19:40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와 행동
람시스 킬라니 팔레스타인계 독일인 활동가 **요르고스 고고스** 그리스 피레우스항만공사 항만노동자노조 위원장
기와 단다시 재한 레바논인, 경성대학교 교수 **조수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공동운영진

일시 9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B2 다목적홀

참가비: 20,000원 (대학생·난민: 13,000원) 한국어·영어·아랍어 통역 제공
문의: 010-2846-1948 / people.freepalestine@gmail.com

가자 학살 3년
10-11 국제 공동 행동
10월 11일(일) 오후 2시 서울 열린송헌녹지광장 입구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행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들!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트럼프·네타냐후의 전쟁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